"증거 있나요?" 최순실, 반성 기미 없어

증인신문 진행될수록 공격적 답변 · 오만한 태도 일관

'이권' '고영태'에 민감

대통령 측 신문에는 침착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다.

"그게 증거가 있나요?" "왜 그렇게 보시죠?"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에게 반성의 기미는 전혀 찾을 수 없었다.

반성은커녕 일부 질문에 언성을 높이거나 불쾌한 기색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 헌법재판소 도착 직후 심판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던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그곳에 있었다.

16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비선실세' 최순실(61)씨는 "청와대에 출입한 적 있느냐"는 국회 탄핵 소추위원단 측 변호인의 첫 질문에 "출입한 적 있다"고 인정하며 방청객들에게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품게 했다.

하지만 여기까지였다. 이후 최씨는 시종일관 퉁명스럽게 "기억이 안 난다" "그건 모르겠다"는 답변만 앵무새처럼 반복했고, 짜증이 섞인 듯 하거나 언짢은 말투를 써가며 반박을 하기도 했다.

최씨는 청와대 출입의 이유에 대해 "(대통령의) 개인적인 일을 도우러 갔다"고 말했고, 개인적인 일이라는 게 무엇이냐고 국회 측 변호인이 재차 묻자 "사생활이라 말하기 곤란하다"는 이해하기 힘든 대답을 했다.

최씨는 특히 '이권'과 '고영태'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국회 측 변호인이 "'의상실'은 고영태씨의 명의로 임차돼 사용됐는데, 고씨 진술에 의하면 보증금 2000만원과 월세 150만원을 증인(최씨)이 냈다고 한다. 사실이냐"고 묻자 "고영태의 진술은 진실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이 "월세를 낸 건 기억이 날 것 같다"고 묻자 "오래 전이라서 기억이 안 난다"고 대답했고, "의상실 직원 4명의 급여가 1500만원 정도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증인이 지불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다시 목소리 톤을 높이며 "고영태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고영태 진술은) 이미 계획된 걸로 보인다. 고영태 얘기에 내가 답변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또 "대통령 취임 전부터 정부 문화체육사업이라든가, 딸인 정유라씨 승마 지원과 관련해 어떤 이권이나 특혜를 염두해두고 개입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단호하게 "전 어떤 이권을 챙긴 적도 없고, 논리의 비약이라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최씨의 태도는 증인신문이 진행될수록 공격적으로 변해 갔다.

최씨는 국회 측 변호인이 "대통령 취임 후 문화체육관광부예산사업을 보면 'VIP 지시사항'이라는 게 87건에 이른다. 문체부 예산 편성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던지자 불쾌하다는 듯 "그게 증거가 있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대통령이 취임한 뒤 문화체육스포츠 사업 진흥을 내걸고 문체부 이권 도모한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어떤 이권인지 말해달라"고 반박했다.

최씨는 모호한 대답을 던진 후 국회 측 변호인이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지 않느냐"고 다그치면 도리어 "질문을 확실히 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는 신문 시작 전 국회 측 변호인이 박 대통령에 대해 "이제부터 피청구인이라고 칭하겠다"고 밝혔음에도 중간 중간에 "피청구인이요?"라고 의도적으로 반문하기도 했다.

최씨는 신문이 진행되는 내내 "고영태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 "고영태의 진술은 완전히 조작이다"라는 등 국정농단 사태가 세상에 알려지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에 대해 극도의 거부감을 드러냈다.

또 본인의 부정한 이권 의혹 관련 질문에 "왜 그렇게 보느냐" "무슨 대답을 원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런 유도 신문엔 답하지 않겠다"라는 등 청구인 측 변호인과 마치 말싸움을 하려는 듯 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질문에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공격적으로 반박한 최씨는 일부 사실을 인정하는 답변에는 확실하게 말하기보다 주로 "그런 것 같다"는 식의 표현을 사용했다.

최씨는 국정에 있어 단순히 의견을 피력했을 뿐이라고 강조할 때 "재판장님, 전 정말 억울합니다"라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최씨는 국회 측 변호인과의 증인신문 때 "대통령이 관심있는 두 재단(미르·케이스포츠)인데 증인은 그냥 됐다는 것이냐. 면접도 하고 그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무슨 대답을 원하는지 모르겠다"고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에 국회 측 변호인이 "'네, 아니오'로 대답하라"고 하자 "질문을 정확히 해달라"고 재차 따지기도 했다.

이렇듯 오전 내내 오만한 태도로 일관했던 최씨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된 박 대통령 측 변호인 신문에서는 침착한 모습으로 돌변했다.

그는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의 질문에 단 한 번도 언성을 말투를 높이지 않고 차분하게 대답했다.

"기억 안 난다"를 남발하지 않고 "있다" "없다" "모르겠다" 등 성격이 분명한 답변을 내놔 국회 측 변호인과의 증인신문 때처럼 양 측이 부딪혔던 것과 대조됐다.

답변도 비교적 적극적이었다.

최씨는 이 변호사가 "'문고리 3인방'과 젊은 시절부터 알아왔고, 증인이 대통령과 친한 사이라서 말을 놓는 사이였다는 것을 인정하느냐"고 묻자 "친분은 있었지만 말을 놓진 않았다"고 대답했다.

이어 "대통령은 (최씨가) 3인방을 동생처럼 대하는 것을 알았나"라는 질문에는 "그런 개인 관계까지 모르고 계셨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씨는 "대통령에게 정유라씨가 승마 선수라는 것 말한 적 있나"라는 질문에는 "말한 적은 없지만 알고는 있었을 것"이라며 내용을 스스로 확장해 답변하기도 했다. /뉴시스

김광수, '자봉센터 선피아 · 관피아 금지법' 발의

국회 김광수 의원은 16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금지하고, 비영리 법인에게만 위탁.운영하도록 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국가기관 등이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해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가기관 등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예외조항으로 인해 현재 다수의 자원봉사센터에 전.현직 공무원이 자원봉사센터의 장을 겸직하거나 선거를 도왔던 선피아(선거마피아)가 센터의 장에 임명되고 있다.

그 결과 자원봉사센터가 센터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 자원봉사의 기본정신인 자율성.자발성.정치적 중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김광수 의원이 행정자치부에 제출받은 '전국 자원봉사센터(245개) 주요직원(센터장 등) 경력'에 따르면 센터장의 경우 총 245석 중 퇴직공무원이 72석, 공무원 겸직이 48석, 기타 116석, 공석 9석으로 퇴직공무원과 공무원을 겸직하고 있는 센터장의 비율이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자원봉사센터가 퇴직 공무원, 현직 공무원들의 보은 인사로 악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해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를 비영리 법인에게만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김광수 의원은 "현행법상 민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국가가 기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탓에 자원봉사센터에 지자체의 입김이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변질됐다"며 "개정안을 통해 자원봉사활동의 본 취지인 자율성과 자발성.정치적 중립성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재용 기자

특검, 김기춘 · 조윤선 오늘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박영수(65·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오는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전격 소환 조사한다.

이규철 특검보는 16일 브리핑을 통해 "17일 오전 9시30분에 조 장관을, 오전 10시에 김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수사팀의 사정으로 두 사람을 동시에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16일 오전 전격적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대질 신문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필요하면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는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리스트는 정부에 비우호적인 문화계 인사 약 1만 명의 명단이 포함됐으며 이들을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문건은 교육문화수석실로 전달된 뒤 문체부에서 실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압수수색 과정에서 명단 일부를 확보한 바 있다.

특검팀은 리스트의 작성이나 관리 과정에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이 개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문체부에서 벌어진 부당한 인사조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블랙리스트'라고 불리는 '문화계 지원배제 명단'이 나왔고, 그 배후에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이 개입된 사실을 파악한 것이다.

김 전 실장은 리스트 작성을 처음부터 주도했으며, 조 장관은 리스트 작성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맡으면서 이 작업에 개입하고 시행하는 데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오후 리스트 의혹에 연루돼 구속 수감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중 김 전 장관은 김 전 실장의 주도로 작성된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넘겨받아 관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김 전 실장에게 질책을 받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뉴시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전북도 적극적인 행정

양성빈 도의원 적극적 촉구 결과… 이행강제금 완화 건축조례 개정 중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이 내년 3월 24일까지 완료될 예정인 가운데 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이 전북도의 행정적 지원을 재차 촉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양성빈 의원은 지난 2016년 행정사무감사, 5분발언 등을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대한 도 대책을 여러 차례 촉구한 바 있다.

또한 농림부, 국토부, 환경부 등에 축산농가와 지자체의 실정을 반영한 현실적인 정책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출한 상태로 지자체 차원에서 하기 힘든 각종 애로사항을 정부차원에서 해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 같은 양 의원의 적극적인 행보가 이어지자 최근 전북도에서도 발 빠른 행정을 보여주고 있어 적법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축산농가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 의원에 따르면 도 축산과에서는 오는 1월 말까지 도내 무허가축사 중에 실제로 적법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농가를 파악하는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직접 시.군을 방문해 타 시.군 사례소개와 시급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축사허가절차를 담당하는 주택건축과에서는 시.군에서 이행강제금 완화를 위한 건축조례를 조속히 개정할 수 있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권고하는 중이다.

현재 14개 시.군 중 총 8군데가 이행강제금 완화 조례개정을 완료했으며, 6군데가 현재 개정을 준비 중에 있다.

양 의원은 "농림부 집계결과 현재까지 전북도 무허가축사 적법화 실적이 3%밖에 되지 않고 1단계 유예기간도 1년 여 정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다행히 전북도가 지난 12월부터는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고 있지만 아직 많은 무허가축사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도는 축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 도, 시.군이 협조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예기간 내에 무허가축사를 적법화하게 되면 완화된 규정으로 무허가축사 건축물에 대한 정리도 되지만 무엇보다 축사규모에 맞게 분뇨처리시설을 합법적으로 갖출 수 있게 되므로 축산농가는 물론 인근 지역주민분들과 주변환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법화율 100%가 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챙겨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내 무허가축사는 전체 축사 농가 1만3,134호 중 5,529호로 총 42.1%를 차지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기득권 누리는 분들 야권에도 있다"

과거 민주당 탈당세력 비판… "그러나 정권교체 대의 앞에 함께 할 것"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6일 "기득권 누리는 분들은 야권에도 있다"며 과거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국민의당으로 옮긴 인사들을 비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장윤선·박정호의 팟짱'에 출연해 "정말 기득권 세력은 새누리당에만 있는 것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는 타협해야 하지만 원칙을 타협할 수는 없다. 혁신을 포기하는 타협을 할 수는 없다"며 "그때 우리 당을 나간 사람은 혁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다"고 단언했다.

다만 문 전 대표는 "우리 당을 나가서 다른 당을 하는 분들이 그런 차이는 있지만 그 차이가 정권교체라는 대의보다 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정권교체라는 대의 앞에서 저는 얼마든지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권교체라는 대의 앞에서는 결국 민주당과 함께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믿는다"며 "정권교체 이후 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을 새롭게 개혁·개조하는 것인데, 대한민국 적폐 청산의 대의도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국민의당과의 연대에 무게를 뒀다.

문 전 대표는 친노·친문패권주의 관련 질문에는 "노무현·문재인을 지지하는 온 국민이 친노·친문인데 그 국민을 친노·친문으로 가둘 수 있나"라고 반박했다.

그는 "정상적인 나라, 상식적인 나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자는 꿈을 꾸는 분은 다 친노고 친문"이라며 "비상식적인 기득권을 누리는 반칙과 특권의 세력, 부정부패 세력이 하는 프레임 공격이 친노·친문 패권을 공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 당과 맞서는 그런 세력을 우리 당 의원들이 형성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문 전 대표는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주장에 대해서는 "지금 임기 단축 이야기가 왜 나오는지 저는 모르겠다"며 "임기 단축은 개헌이 이뤄지면 개헌에 의해 선택되는 권력구조에 따라서 논의될 문제"라고 일축했다.

문 전 대표는 그러면서 "정치인을 위한 개헌을 해서는 안 된다"며 "몇몇 유력 정치인이 모여서 합의하면 개헌이 될 것처럼 말하는 게 그야말로 구시대 정치의 전형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뉴시스

국회, '국정교과서 금지법' 첫 심의

정부가 오는 2018년 국정 역사 교과서 전면 시행 방침을 밝힌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국정교과서 금지법'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는 16일 오후 2시 새누리당이 안건조정법안으로 지정한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 첫 심의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위 유은혜 위원장실 관계자는 "오늘 (역사교과용 도서 다양성 보장에 대한 특별법)첫 심의를 시작으로 이번주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표결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은 역사교육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역사교과서의 국정 발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전체회의에 상정됐지만 새누리당의 반발로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됐다.

국정교과서는 90일간 안건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되면 자동 용도 폐기된다. 국회법 57조 2항에 따르면 이견이 있는 안건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국회 상임위가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해 90일간 논의하도록 규정 돼 있다.

안건조정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유은혜·조승래·김민기 의원,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 바른정당 이은재 의원 등 총 6명이다. /뉴시스